



주민 반발 심화...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난항'

200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데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선정 작업이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1차 공모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2차 공모에서도 입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2030년 자원회수시설 가동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차 공모 응모 요건을 충족한 서구 매월동(개인), 북구 장등동(개인), 광산구 삼거동(법인) 등 3곳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이달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위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와 협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입지를 최종 결정하고 고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용역 기관은 3곳을 대상으로 입지적 조건(7개), 사회적 조건(5개), 환경적 조건(4개), 기술적 조건(3개), 경제적 조건(4개) 등 총 23개 평가 항목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조건 평가 항목에는 부지 공모 신청 여부, 주민 호응도 및 민원 발생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예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광주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삼거동의 한 시설에서 주민 설명회를 요청, 지난달 26일 개최했

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삼거동 쓰레기 소각장 유치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 동의 50%를 충족하지 못한 삼거동을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여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매월동 주민들도 최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소각장 건립 추진은 밀실 행정"이라며 "고도 제한으로 인해

요건 충족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후보지 3곳 반대 주민들, 환경·건강권 침해 "절대 불가" 시 "주민 소통 강화...무조건 이달 내 최종 후보지 결정"

소각장 굴뚝 높이가 45m로 매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진보당 서구를 지역위원회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자원회

수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등동에서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반대 주민들은 공모 기준인 300m 이내가 아닌, 300m 밖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오염 물질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나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 반발로 인해 적정성 평가가 지연되면서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최종 후보지 발표도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 문제 등을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2016년 12월 폐쇄된 상무소각장

의 다이옥신 수치는 0.005ng-TEQ/Sm³(2015년 기준), 2013년 가동을 시작한 충남 아산시 소각시설의 경우 0.001ng-TEQ/Sm³(2023년 기준) 수준이다.

이는 법적 허용 기준 0.1ng-TEQ/Sm³, 설계 기준 0.01ng-TEQ/Sm³과 비교할 때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0배나 낮은 수치여서 광주에 새로 건립할 자원회수시설 역시 기준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광주시는 후보지 3곳 중 1곳에 대한 법적 자문 회신을 받는 대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달 내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달 내에 무조건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반드시 들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2029년 완공, 2030년 가동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유치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특별지원금 500억원을 비롯, 공사비의 20% 범위인 800억원 규모 편익시설(문화·체육·여가) 설치, 운영 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매년 10억원 이상) 주민지원 기금 조성 등 총 1천억원 이상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박선강 기자



"우리 지역 결사 반대"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역 중 한 곳인 북구 장등동 주민들이 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소각장 설치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래리 기자

호남권 광역단체장 7년만에 만난다

(광주·전남·전북)

4일 전북 정읍시 호남권정책협의회...경제공동체 협약

비공개 회의 협력 과제 논의 '메가시티' 구체화 주목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 등 호남권 3개 광역단체장이 오는 4일 7년 만에 만나 '호남권 경제공동체' 협약을 맺을 예정이어서 '메가시티' 공동 추진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1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도는 오는 4일 오전 10시30

분 전북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는 호남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와 함께 경제공동체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공동체 협약에는 초광역 교통망, 신재생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등 지역별 특화 미래 산업 육성, 초광역 협력 체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는 경제공동체 협약식에 이어 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도 진행된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기존 협력과제 추진 경과 보고, 사·도별 현안과제 보고, 협력과제 발전 방안 논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3개 시·도는 1일 각 지역별 안건을 제출해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2일엔 시·도 기획조정실장 영상 회의를 거쳐 3일 최종 안건을 확정하고 공동합의문 초안을 만들 방침이다.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미 출범했고 전남도 역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선 8기 후반기를 맞는 3개 시·도가 어떤 형태로 호남권 상생 협력을 구체화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5일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이 힘을 합쳐 서울, 광주, 부산 3축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강력한 축으로 성장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행정통합은 의미가 없으며 연방제에 준하는 정부의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자치도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여론 등에 따라 경제공동체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2004년 출범한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2008년 중단됐다가 2014년 민선 6기 때 부활해 매년 두 차례 열렸다.

교통·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창구였지만 2017년 3월,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가 나주에서 만난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김재정 기자

Today

- 미용권자 70% "바이든 사퇴해야" 8면
- 독서교육이 미래교육을 만든다 9면
- KIA '1위 수성' 달빛시리즈 빅매치 16면

주민에게 한 걸음 더, 치안 친절을 한번 더!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으로 도민이 행복한 안전전남을 만들어 갑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과학 치안 기반의 미래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주민 참여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 확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JeollaNamdo Police Commission